

도청과 언론 윤리

우병동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늘날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도청과 불법 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책임 있는 언론들까지 불법 도청을 하거나 도청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전반적으로 취재에 대한 언론의 윤리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언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의식(self-constraint)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엿듣기나 엿보기 등 비윤리적 취재 방법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함께 개인의 정보 생성과 확산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유통이 확대되면서 언론의 정보 질서에 대한 책임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내가 그때 모두들 퇴근한 뒤 형사반장실 자물쇠를 따고 숨어 들어갔지. 서랍을 열고 보니 그때까지 수사 상황이 적힌 일지가 있지 않았겠어? 그대로 들고 나와 다음날 줄줄이 베껴 내니까 엄청난 특종이 되었지...”
“나는 회의실 바닥 마루를 들어내고 들어가 누워서 형사들 회의하는 걸 그대로 듣고 기사로 썼더니, 도대체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느냐고 한바탕 난리를 치던 걸...”

필자가 기자생활을 하던 70년대에는 고참 기자들이 이런 무용담 한 두 개씩은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런 특종 기록이 많을수록 존경받는 민완 기자로 치부되었었다. 물론 요즘 그랬다가는 당장에 손목에 수갑을 차고 경찰에 끌려가야 하는 일들이다. 실제로 몇 년 전 모 일간지의 기자가 사건관련자 집에 찾아가 검찰에서 나왔다고 사칭하고 증거서류를 가져갔다가 검거된 적이 있다. 이제는 옛날처럼 법을 어기거나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우격다짐으로 취재를 하다가는

“전반적으로 취재에 대한 언론의 윤리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언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의식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옛듣기나 옛보기 등 비윤리적 취재 방법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시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대접을 받게 되었다.

과거에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 라는 이름 아래 많은 특혜를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웬만한 행사나 공연장, 경기장에는 무료입장을 하는 것은 물론 교통 규칙을 포함해 질서를 지키는 데서도 예외로 통했다. 관례 라는 이름으로 촌지나 향응을 받는 것도 당연시 됐고 출입처를 우박질러 한 해에 한 번 쯤은 취재 명목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곤 했었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독자나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기사만 써내면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다 보니 취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탈법과 무리가 행해졌다. 위에서 언급했던 불법 침입이나 강탈은 물론이고 옛듣기(도청)와 옛보기(몰래 카메라), 다른 신분으로 가장하기, 위장 취재, 함정 취재를 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공중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사고 수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쳐서 피를 툴툴 흘리는 희생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마이크를 들이대는 모습도 다반사였다. 그래서 오로지 특종, 남보다 더 빨리, 더 튀는 장면을 보도하면 그걸로 인정 받는 풍토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지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DJ 정권과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언론은 갖가지 비윤리적인 행태를 청산해 왔다.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권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 비정통성을 언론에게 베푸는 당근으로 해결하려 했다. 물론 강압적인 채찍으로 언론의 입을 막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콤플렉스 때문에 언론의 여러 가지 비리를 눈감아주고 오히려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자신의 할 일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서자 상황은 달라졌다. 선거를 통해 정당한 권력을 확보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언론사 세무조사였고 사이버 언론 색출 작업이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들어난 언론사의 각종 비리들을 틀어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언론사들은 종래의 오만과 특권을 행할 수 없었다. 서서히 언론계에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언론이 더 이상 비리와 특혜의 온상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 소극적인 방어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유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또다시 시행되고 이번에는 아예 그 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도 높은 언론정화운동을 펼쳐나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걸음 더 나가 주류 언론과의 전쟁

을 선포하면서, 그동안 누려오던 언론의 기득권과 특혜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언론보다 우위에서 관계를 재정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도 더 이상 비윤리적 행태를 지속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비리를 바로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정부 부처나 여러 기관에서 당연한 것처럼 차지하고 있던 기자실이라는 특권성 공간을 자진해서 철폐하고 기자실을 중심으로 펼쳐지던 각종 특혜를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받아오던 촌지나 향응을 자제하기 시작했고, 취재 방법에서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기법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나갔다. 언론계의 화두도 ‘윤리’라는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때맞추어 학계의 관심도 그 쪽으로 맞추어져 많은 연구 논문과 저서들이 언론 윤리를 주제로 해서 발표되었다. 언론계의 자성 움직임과 함께 기자 사회에 자발적 규제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 언론도 지난 70년대까지는 대단히 공격적(aggressive)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50년대 이전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 그리고 피상적인 객관주의 보도때문에 제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반성으로 나타난 60년대의 뉴 저널리즘(new journalism)은 과감한 잠입(intrusion)과 위장(posing) 등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이나 기업들의 비리를 가차 없이 적발하고 폭로함으로써 언론의 파수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 정점을 이룬 것이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지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도 월남전의 참상을 파헤친 ‘미라이 촌 학살사건’

“디지털과 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도청은 오늘날 더 광범위하게, 더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대규모의 정보 침탈이 이루어져 큰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

보도 등 획기적인 탐사보도의 결과물들이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러나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나타난 부작용으로 지나친 언론의 공격성과 무책임한 보도 기법과 자극적인 보도 태도 등이 나타났다. 워터게이트로 언론의 큰 공적을 세운 <워싱턴 포스트>지는 결국 공명심에 불탄 젊은 여기자의 작문인 ‘지미의 세계’ (Jimmy's World) 기사로 자멸하고 말았다.

여덟 살의 아편중독자를 다룬 ‘지미의 세계’는 자넷 쿡 기자에게 폴리처상의 영광을 안겨 주었으나 곧 그 기사가 작문으로 밝혀져 폴리처상 회수는 물론이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어 ‘지미의 세계’ 때도 편집국장의 자리를 지킨 벤자민 브래들리는 “워터게이트의 환상에 사로잡혀 쿡 기자에게 익명의 뉴스원을 밝히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결국 지나친 보도 욕심은 무리한 취재 방법을 동원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보도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 당시 미국 언론인들의 반성이었다. 이후 미국의 보도 원칙은 다시 책임 있는 객관보도로 바뀌게 된다. 1972년 미국 신문편집인 협회(ASNE) 연차총회에서 언론인들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보도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합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79년 풀리처 상 심사위원회는 <시카고 선타임즈>지의 충격적 폭로 보도를 수상에서 탈락시켰다. 이 신문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시카고 시 공무원들의 뇌물 갈취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자그마한 술집을 빌리고 기자들을 동원해 영업을 시키는 함정 취재를 벌였다. 화장실 천정에 구멍을 뚫고 사진 기자를 대기시킨 채 뇌물을 뜯으러 오는 공무원들을 화장실로 인도해 뇌물을 받는 장면을 낱알이 찍어 신문에 폭로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 결과로 많은 공무원들이 목이 달아나는 공적을 올렸다. 그러나 시상위원회는 이 취재 방법이 속임수 취재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을 주지 않았다. 위원회는 “신문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정직과 성실을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언론이 스스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후 언론은 충격적인 특종보다도 보도 대상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충격적인 결과보다 보도 대상과 그 연루자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보도 자세가 바뀌었다.

이처럼 언론의 보도가 윤리적인 자세로 바뀌고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쪽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청이다. 디지털과 전자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도청은 오늘날 더 광범위하게, 더 교묘히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대규모의 정보 침탈이 이루어져 큰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해킹은 단순한 정보의 도용에 머물지 않고 남의 정보를 파괴하거

나 대규모 네트워크를 혼란에 빠뜨려 일종의 정보 공황상태까지 초래한다.

사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행복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법적으로 사생활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와 관련된 정보를 남이 함부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나 말, 모습(초상)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개인의 병력이나 재산상태, 이력이나 경력 등이 비밀로 분류되어 본인의 허락 없이 남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다. 사생활은 재산이나 거주 공간 등 물리적인 소유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나 생각 등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된다. 그런데 남의 생각이나 의견을 본인의 허락 없이 엿듣고 침해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언론이 취재를 목적으로 엿듣기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정보 도용 사태는 작게는 개인에 대한 피해요, 크게는 사회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정한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고, 은행이나 정부 기관 등 주요 기관들이 해커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마비되는 사태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정보의 도용과 불법 침탈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비리와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이 도청이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한다는 것은

“언론은 윤리적 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무책임하고 부정확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정보들을 걸러내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 건강한 정보 유통을 주도해야한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이 이러한 옳지 못한 취재 방법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속속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영국에서 168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던 타블로이드 <뉴스 오브 더 월드>(NoW)지가 도청을 한 것이 밝혀져 전격적으로 폐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신문은 유명 인사들과 범죄 피해자, 아프가니스탄 파견 장병 가족들의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를 해킹하여 보도에 사용한 것이 들끓어나 크게 비난을 받게 되자 급기야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는 경찰이 마약 판매상인 앤트완 존스의 차량에 GPS를 탑재하고 그것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존스를 기소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4조에서 규정한 불법 정보수집 금지 조항을 근거로 했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유 없는 불법 압수 수색으로부터 개인의 신체 재산 및 서류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도청과 관련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각심을 불러오고 있다. 얼마 전에 KBS가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하여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이 한 여당의원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제기된 이 의혹은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처리되기는 했으나 공개된 회의내용이 거의 정확한데도 도청한 것으로 의혹을 산 KBS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한꺼번에 분실했다고 말한 것 등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는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KBS 김인규 사장이 야당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벽치기(바깥에서 벽에 붙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취재 방법)는 통상적으로 해오는 취재 기법인데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앞에서 지적한 과거 비윤리적 취재 방식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여당 국회의원의 비서라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퍼부어 투표시간대에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정보의 사용과 침탈 행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IT 기술과 무한대로 확장되어질 사이버 공간 등을 생각해 보면 개인의 정보 보안은 점점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오래전에 조지 오웰에 의해 경고된 정보의 집중과 통제 현상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개인의 정보 자유와 권리는 점점 더 제한되고 위축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일수록 언론은 윤리적 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우리 사회를 정보의 파행 상태에서 건져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책임하고 부정확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는 정보들을 걸러내어 정확하

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 건강한 정보 유통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기관이나 개인들이 특정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언론이 감시하고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손쉽게 취재를 하겠다고 도청을 하거나 남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보 유통과 관리 체계는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언론은 다시 한 번 윤리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사회의 무절제한 정보 흐름을 바로잡는데 노력해야 할 때다.

